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5347 |
|----------|------|

발의연월일 : 2020. 11. 13.

발 의 자 : 남인순 · 이상현 · 김승원
양정숙 · 윤재갑 · 홍성국
안규백 · 최혜영 · 이광재
박홍근 · 윤준병 · 민형배
이규민 · 허종식 · 정춘숙
박성준 · 전해숙 · 김경만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의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활기업 설립·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활기업 인정 및 인정취소,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 구매, 투명한 기업관리를 위한 보고의무 등을 신설하여 성실한 자활기

업을 보호·육성하고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및 제50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7까지를 각각 제18조의7부터 제18조의12까지로 하고,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자활기업의 인정) ①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설립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할 것
2.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일 것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 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자활기업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의4(보고 등) ①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운영현황, 사업실적 등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서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을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의5(자활기업 인정취소) ①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 악화 등으로 자진하여 인정서를 반납하는 경우
5.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보장기관은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의 이유로 인정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자활기업이 아닌 자는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3.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6을 위반하여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한 자는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자활기업) ①·② (생략) | 제18조(자활기업)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 ----- ----- ----- -----.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u> | <u><삭 제></u> |
| <u><신 설></u> | 5. <u>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u> |
| 5. (생략)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 ④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u>제18조의2(자활기업의 인정) ①</u> <u>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u> 1. <u>설립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u> |

<신 설>

상위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
으로 구성할 것

2.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
위자가 3분의 1 이상일 것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 인
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18조의3(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
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자활기업
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
우에는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8조의4(보고 등) ①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운영현황, 사업실적 등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을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의5(자활기업 인정취소) ①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 악화 등으로 자진하여 인정서를 반납하는 경우
 5.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보장기관은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의 이유로 인정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
|--|---|
| <p><u><신 설></u></p> <p><u>제18조의2</u>(고용촉진) (생략)</p> <p><u>제18조의3</u>(자활기금의 적립) (생략)</p> <p><u>제18조의4</u>(자산형성지원) (생략)</p> <p><u>제18조의5</u>(자활의 교육 등) (생략)</p> <p><u>제18조의6</u>(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생략)</p> <p><u>제18조의7</u>(개인정보의 보호) (생략)</p> <p><u><신 설></u></p> | <p><u>다.</u></p> <p><u>제18조의6</u>(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자활기업이 아닌 자는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u>제18조의7</u>(고용촉진) (현행 제18조의2와 같음)</p> <p><u>제18조의8</u>(자활기금의 적립) (현행 제18조의3과 같음)</p> <p><u>제18조의9</u>(자산형성지원) (현행 제18조의4와 같음)</p> <p><u>제18조의10</u>(자활의 교육 등) (현행 제18조의5와 같음)</p> <p><u>제18조의11</u>(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현행 제18조의6과 같음)</p> <p><u>제18조의12</u>(개인정보의 보호) (현행 제18조의7과 같음)</p> <p><u>제50조의2</u>(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p> |
|--|---|

| | |
|--|---|
| | <p><u>2.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u></p> <p><u>3.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p> <p><u>4. 제18조의6을 위반하여 자활 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한 자</u></p> <p><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 다.</u></p> |
|--|---|